남북변화 외면한 낡은 '법의 저울'

시사논단 인공기 게양에 따른 국보법 적용에 대한 시론적 고찰

전국 각대학가에 인공기게양에 대해 정부와 학생등간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전달반을 구성하고 관련자전원을 국가보안법 (반)국가단체찬양고무)위반혐의로 구속키로 하고 검거에 나섰다. 이에 대해 정부의 강력대응에도 불구, 고 일부대학에서는 인공기게양에 대해 국가보안법적용은 시대 착오적이라 주장하며 인공기게양투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한이 동시가입했고 상호불가침과 화해를 기본정신으로 하는 남북합의서가 발효된 상황에서 앞으로 북한과의 신뢰조성과 남북한간의 통일 노력에 직·간접적 영향을 끼칠 이러한 국가보안법의 적용은 또한 뜨겁한 쟁점없이 맞이한 줄 하반기 운동방향에서 확실히 이끌어 왔던 통일운동이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대표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법률로서 성립된 적이 없었다. 현행 군사무에타 이후 불법으로 국회를 해산하고 국민의 위임없이 임의로 결성한 국가재건최고회의와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만든 공법 및 현행 국가보안법은 헌법 제60조와 41조에 규정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입법권이 행사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률이 아닌 것이다.

또한 정부·여당의 국가보안법 개정안은 지난 1991년 5월 10일 국회에서 민자당 단독으로 날치기 통과되었다. 통과에 걸린 시간은 40초에 불과하였고, 국회의장은 통과된 다음날 일단의 국회의원들을 이끌고 소련으로 유유히 외유를 떠났다. 개정된 국가보안법은 본질에서 바뀐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잠입, 탈출, 찬양, 고무는 여전히 범죄이다.

법을 뜯어 고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은용상 제한적인 적용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워낙 그 법문의 다양성, 적용범위의 광범성등의 문제점으로 그 독소가 교환될 수 없는 종류의 법이다. 차법할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의 관건은 현 행국가보안법이 불법의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규정이 많기 때문에 심단한 탄손한 적용, 운용이 아니라 입법자업을 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적절한 기준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렵고 결국 자의적 운용에 빠져 버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실은 그동안의 마르크스 저서나 북한 김정일 출판의 단속에서 일관성의 결여, 일부 인사의 북한방문 허용과 재야인사들의 접촉금지등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1948년 제정되면서부터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은 정치적 남용과 악용의 역사로 점철되어 왔다. 정권의 정당화(이승만 정권), 불법적 정권의 유지, 연장수단(박정희, 전두환정권)으로 국가보안법은 최상의 탄압무기로 작용하였다. 인간에게는 법의 칼날은 공포의 대상이고 가능하면 피할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국가보안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계층이 옛날에 비해 상당히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이 되었는가. 또 이런 법률로써 국가안보가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다. 오히려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이다.

화생들의 인공기게양에 대한 국가보안법의 적용은 대북한 방어조치란 면보다는 오히려 내부 정치적 고려가 보다 핵심적인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실상 매우 정치적인 성격이 강하며 순전한 법적인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인공기 게양에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경계심이 흐트러지게 되고 국가보안법자체가 유명무실해져 공안사범에 대한 단속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근본적인 문제의 소재와 해결은 형법적 대응의 차원을 넘는 곳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일부 학생의 인공기관련 학생회장겸거 향의시위로 경찰서가 파괴되기도 했고, 정치적인 방법으로서 좀더 세련되어야 할 여지도 있지만, 북의 동족에 대한 민족화해 차원의 표용과 애정의 표시였다는 학생들의 주장을 어느 정도 고려하여 그 순수한 의지를 표용해내는 것이 필요하와 있고, 제한적이나마 이산가족의 재회도 이루어 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같은 남북간의 화해와 통일분위기조성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사문화된 국가보안법이 통일논의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현실과 동떨어져 북한에 대한 지식을 차단하고 민족상호간의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고 있다. 대북접촉창구를 정부가 독점하여 지금까지 변화발전하는 남북관계가 한반도부근의 국제정세의 여건변화에 따라 고양된 국민들의 통일열망을 수용하기에는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다.

또한 정부에 대한 불신을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계기로 하여,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통일논의를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국가보안법폐지론을 중심으로 인공기 게양사건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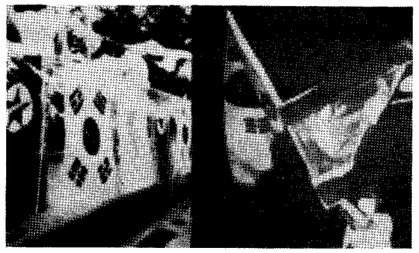
북한사회 및 김일성정권에 반통일, 반민주적 요소가 있다면 단호히 비판하고 개혁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통일을 지향하는 자세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실상에 대한 자의적인 규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북한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북한에 대한 모든 자료가 개방되고, 다양한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야 한다. 또한 북한의 법체계가 '반자유주의적'인 국가보안법을 유지, 강화해야 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이는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질화를 강조하여 분단을 고착화시킬 뿐이다.

법은 보편타당성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다른 공산국가들의 국가게양은 국가보안법에 적용되어야 하고 고르비와 악수한 노태우 대통령도 구속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폐지하거나 통일에 장애가 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입법으로 달리 씌어져야 할 것이다.

법은 사회를 지탱하는 기둥이다. 동시에 법은 불변체인 것이 아니라 사회의 변화를 수용하는 가변적인 것이다. 기둥으로서 법이 올바르지 못할 때 사회는 붕괴한다. 또 법이 그형성되어 사회의 새로운 규구를 담아내지 못할 때 그 사회는 혼란에 빠지며 법으로서의 효력도 잃게 될 것이다.

김 기 영
〈식사3기·법학〉



◇정부와 언론은 인공기를 강조함으로써 생활의 순수한 통일열정을 왜곡했다.

남북관계·사상의 자유 억압한 대표적 악법
남북 합의서 채택 이후도 자의적 남용 여전해

현장취재 "5·19 국민대회의 함성"

명동에 모인 학생들이 '반민자, 반 김영삼'을 외치고 있다.

청량리에서 집결한 동충련 소속 학생들이 동대문에서 경찰의 저지에맞서고 있다.

5월 19일 사실상 단일후보였던 김영삼씨를 대통령 후보로 확정지은 '민자당 전당대회'가 이종찬씨의 불참속에 열렸다. 그동안 민주적 경선이라는 허울좋은 명목으로 국민을 기만해 왔던 민자당이 이종찬후보의 경선거부로 그 본질을 드러내고 말았던 말로인 경선이었다.

민생안정은 뒤로 한채 대권욕에만 휩싸여 집안싸움만 벌인 민자당의 부패한 모습이 여지없이 드러난 것이다.

민자당 전당대회를 맞아 이날 전국 20여곳에서는 '민자당 재집권 저지와 민주정부수립을 위한 제1차 국민대회'가 동시 다발적으로 열렸다.

5·18정신 계승기간으로 지난 5월 9일 있었던 반민자당 집회에 이어 또한번 민자당의 부패성을 알린 이날 서울에서는 학생, 시민등 3만여명이 경찰의 원천봉쇄속에서 '민생외면 대권놀음 민자당 재집권 결사반대'를 외치며 거리행진을 가졌다.

청량리, 명동로, 신촌 등지에서 학교별·지구별 결의대회를 가진 서총련 소속 대학생들과 시민들은 오후 6시 30분경 명동 신세계 백화점 앞 광장에 집결하여 '반민자, 반김영삼'시위를 벌이며 민자당의 실정과 민자당 대통령후보 경선의 실체를 폭로했다.

밤늦게까지 종로·을지로에서 시위를 가진 학생과 시민들은 화염병을 자제하고 투석으로써 경찰의 저지에 맞섰다.

이날 학생과 시민들은 노동자 단합을 위해 만들어진 총액임금제 철폐와 민주인사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 노점 단속 및 강제철거 등의 민민당중립 발표를 중단할 것 등을 요구했다.

출해 들어 최대의 시위였던 이번 국민대회는 12월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부정부패한 민자당의 종기집권 음모를 국민의 심판대에 올리고, 여소야대라는 국민의 뜻을 3당합당으로 무시해버린 김영삼의 대권야욕을 분쇄하며 나아가 민주정부수립의 염원을 달성하자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한편, 전대협등은 이후 계속적인 지지제 조기실시와 반 김영삼 투쟁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안성모 記者〉

용기 잃은 지식인의 '말조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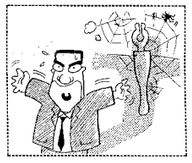
옛말에 말은 모든 화의 근원이라 하였다. 그래서인지 말에 관한 속담이 그렇게도 많았던 모양이다. 특히, 나른 소문은 그 전파속도가 유달리 빠르다고들 이야기한다.

같은 때라인지 모르지만 논평에 휘말릴 만한 말은 대단한 용기가 없이는 함수 없었다. 역사의 선각자들은 그들의 삶이 생전에 빛을 발하지 못했고 배척받아야만 했다.

지금의 세태는 특별한 선각자가 아니어도 논평이 되었다는 것만으로 배척당하고 있다. 이전과 그리 다르지 않은 모양이다. 말 많은 사람이 어디가서나 좋은 소리를 들을수 없어서인지도 모르지만 지금 대부분의 소위 지식인들 또한 말조심에 상당한 신경을 쓰는것 같다.

결론부터 이야기한면 모든 사람들이 방관자로 서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만족한다. 그들은 글을 쓰려하지 않는다. 괜히 다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림 위험이 있고 논쟁에 휘말릴수 있기 때문이다. 곧 그렇게 말에 없는 이유는 지금의 사회구조속에서 일단 적응면(?) 인간적인 공계뿐 아니라 사회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모든 장애물을 피해가려고 하니 글을 올 공간이 생길리 만무하고 글은 생각만큼 나오지도 않는다. 답연한 귀결이다.

학내에서 뿐만 아니라 학외에서 미표한 문제들이 주위에서는 계속 발생한다. 엄마전 등록금문제에서부터 서로의 현안의 입장 차이나 내부의 마찰 등 많은 것에 자신의 입장 또는 생각을 입으로 이야기한다. 물론 이 입으로 이야기 한 말은 묘한



단서가 붙는다. 모든 것을 떠난 순수한 자신의 입장이며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그들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나오면 누구보다도 화를 먼저 낸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글쓴이들을 몰아세운다. 자신의 입장을 확고히 밝히지 않는다. 이러한 무리들은 필요이상의 행동이 부른 결과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이러한 무리들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 이들은 화를 냄중은 알지만 분노함중은 모른다. 조그마한 것을 발견하지만 결코 그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앞에서 말하거나 글을 쓰지 못한다. 쓴다하여도 그 글은 본질을 피해 달아나기에 바쁘다. 자기 방어의 방패를 크고 튼튼하게 하기위해 글의 핵심을 소비한다. 그리고 진정 하고자하는 이야기는 그저 빗금목의 벽에 'XX는 XXX다.'라고 낙서하는 것이 고작이다. 바로 자신의 순수한 입장이다.

요즈음 우리는 무사안일주의와 보신주의의 틀속에 빠져살고 있다고 말한다. 지식인들의 바로 이런 보수적 틀과 인식의 구시대적 발상들과 결코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모든 이들이 외면자와 방관자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자신은 이러 이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글을 쓰면 안된다. 만약 내가 글을 쓰면 이 문제로 논란의 대상이 되므로 바음은 있지만 행동은 어렵다.

하고 싶은 말을 다하고 살수도 없다. 하지만 할말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구차한 변명을 계속 늘어 놓을 수 밖에 없는 것인지 다시한번 생각해 보자.

말하라 그대들이 생각하는바를.

공 고

1992학년도 1학기 재학생주소록 변경기간

재학생중 현주소가 변동된 학생은 필히 주소변경을 하여야 성적표와 등록금고지서가 정확히 배달되니 아래기간을 엄수하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1. 일시: 1992년 5월 25일 ~ 6월5일
2. 장소: 해당대학 교무실또는 학과 사무실
3. 직성요령
   가. 변동된 학생은 자신의 주소록에 두줄을 긋고 붉은 색으로 우편번호까지 정정해야 함.
   나. 미등재자는 마지막 장에 등재해야 함. 단, 주소가 변경되지 않은 학생도 자신의 현주소를 알맞하여 우편번호, 동, 통, 반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자신의 성명열에 서명하여야 함.
   라.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학생은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이름과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교 무 처 장

입학금 및 등록금 잔액환불공고

신입생들의 입학금 및 등록금 잔액을 다음과 같이 환불함.

1. 일시
   1992년 5월 26일 ~ 29일 (4일간)
2. 장소
   본관 경리과
3. 지참물
   학생증, 도장

등 록 공 고

총학 구파 남부자 및 미등록자를 위한 등록일을 다음과 같이 공고함.

1. 일시
   1992년 5월 25일 ~ 29일 (5일간)
2. 장소
   구내우체국

서울 캠퍼스
교 무 처 장

1992년 제5차 하계 해외 연수 계획

동아시아국가에 대한 지역연구를 중심으로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대학원 연구시를 "동아시아 연구회"에서는 동아시아 각국에 대한 직접 현지답사활동의 일환으로 매년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년 하계연수지역으로 중국지역을 선정하였으니 국제화시대에 부응하여 지회 뜻을 같이 하고자 하는 모든 대학원생 및 졸회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합니다.

♣ 아래 ♣

■연수국가:중국(중화인국공화국)
■연수지역:위해-연태-복경-연길-룡정-백두산
■교통수단:인천에서 위해간은 FREEY호 이용, 연태에서 북경과, 북경에서 연길간은 중국민항 탑승
기타 구간은 열차와 전영버스 이용
■연수기간:1992년7월16일(수)부터 7월25일(금) —— 총 9박10일 ——
■숙박형태:외국인 호텔 2인1실
■모집인원:지도교수 포함 30인
(선착순 마감은 원칙으로 회종결정은 본연구회의 전권으로 함)
■모집대상:모든 대학생 및 졸회인
■모집마감:1992년6월10일
■연수비용:총 800,000원
(여행자보험 및 포타비용 및 단수여권 발급비포함)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는 TEL:961-0216

동 아 시 아 연 구 회

동아시아 연구회 몽고지역세미나 안내

동아시아연구회에서는 몽고지역의 연구를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발표회를 갖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대상지역:몽골인민공화국
■장 소:대학원 소세미나실(본관3층)
매주 목요일12시
■발 표 가:
①몽고의 지리 (3월10일) - 윤병국(지리학과 박사1기)
②몽고의 역사 (3월26일) - 이민호(사학과 석사2기)
4월 3일) - 이준태(사학과 석사)
③몽고의 정치 (4월 9일) - 박옥경(정치학과 석사2기)
(4월16일) - 조종수(정치외교학과 석사)
④몽고의 법률 (4월25일) - 김기영(법학과 석사3기)
(4월30일) - 김덕만(법학과 석사2기)
⑤몽고의 경제 (5월 7일) - 권홍렬(경영학과 석사1기)
(5월14일) - 장병권(경영학과 석사1기)
⑥몽고의 예술 (5월 21일) - 김은정(미술학과 석사1기)
⑦몽고의 교육제도(5월21일) - 김미화
(영어교육학과 석사4기)
⑧몽고관광(6월4일) - 조병희(관광경영학과 석사1기)
⑨몽고의 가족제도(6월11일) - 한유미
(가정학과 박사3기)
⑩일본과 몽고와의 정치경제적 역학(6월18일)
-고우크미 (정치학과 석사1기)

'92 조국순방 여름학교 COUNSELLOR모집안내

'92 조국순방여름학교 및 재미교포고교생 단기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재외교포 자녀들에게 모국어와 역사 그리고 조국의 참모습을 알려줄 카운셀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개요

프로그램 / 내용	조국순방여름학교	교포학생단기교육
교육기간	7월13일-7월15일(3박5일)	6월29일-7월7일(8박9일)
교육장소	충청북도지대학원	수원대학교 대학원
교육인원	50명	150명
교육대상	초,중,고,대학생	고교생
교육과목	한국어,역사,문화예술,한국경제,과학지방문,산업시찰,관광,우리여행(참가 또는 선택안)	
COUNSELLOR 모집인원	0명	0명

2. COUNSELLOR 자격
   가. 본교 3학년-대학원생으로 영어회화 가능한자
   나. 학생들을 통솔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추고 활발이 단정한자.
   다. 의교육생들과 교육기간동안 숙식을 같이 할 수 있는 자.
3. 제출서류
   가. 신청서 1부 나. 이력서 1부
4. 서류제출기간: 1992. 5. 25(월)-6. 6(토)
5. 특전: 장학금(25만원) 지급 예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제교류사무국 (961-0031~2)으로 문의바람

국제교류위원장